

유학생 대상 한국 역사 교재 (2010년대 이후) 분석*

- 고대사 기술을 중심으로 -



권 순 홍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kwon358@naver.com)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역사 교재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외국인 독자를 배려하는 편집 및 구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자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많았다. 둘째, 오래된 역사, 광활한 영토, 강대한 나라 등을 강조하는 국수주의적 서술이 많았고, 오류도 적지 않았다. 셋째, 한국사 체계가 갖는 단일민족의 '발전' 서사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전망하는 한국 사회 내에서의 유효성이 의심된다. 이로써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역사 교재의 엄격한 집필, 엄정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주제어 : 유학생, 한국사, 교과서, 국수주의, 한국사 체계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96275).

I. 머리말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학 재적의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3,697명이다. 대학의 총 재적학생수 1,888,699명 중 약 9%가 외국인 유학생인 셈이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54.7%는 한국에서의 취업 및 정착, 한국으로의 이주, 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 역시 그 일환으로서 중요하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역사 교재가 발간된 사례가 있었지만(전국역사교사모임 2011),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대학의 전공으로 한국학이 신설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학에 대한 학문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역사 교재가 아래와 같이 출간/재출간되었다.¹⁾

- ① 박성준·이선이. 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문화사.
- ② 이연주. 201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의 역사*. 일일구인쇄기획.
- ③ 김경호·박이진·박은영·손성준·김도형. 2020. *(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 시리즈) 한국 역사: 전통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연계 전공 교재편찬위원회. 2021. *(유학생이 알아야 할 한국학시리즈) 한국역사: 근현대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④ 전국역사교사모임. 2021(2판, 1판은 2011년).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휴머니스트.

1) 아래 4종 외에 이가원·신사명·신경환(2018)도 있지만, 이 경우 한국 역사 콘텐츠를 예시문으로 활용한 한국어 교재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4종의 목차

①	②	③	④
I. 한국의 역사 1장 한국인의 기원과 초기 국가의 형성 2장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3장 통일국가 고려의 성립과 전개 4장 조선의 성립과 발전 5장 조선 후기 사회와 근대 의식의 성장 6장 일제의 침략과 한민족의 독립운동 7장 대한민국의 발전	CHAPTER 1. 국가의 형성과 고대사회 1. 선사시대 2. 삼국시대 3. 삼국의 통일 4. 고대의 사회와 문화 CHAPTER 2.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고려 1. 후삼국 통일 2. 고려의 사회와 문화 CHAPTER 3. 500년의 역사 조선의 건국 1. 조선의 건국과 발전 2. 조선의 사회와 문화 3. 임진왜란 4. 실학과 서민문학 CHAPTER 4. 새로운 문물 수용과 독립운동 1. 외세의 침략과 조선의 개항 2. 대한제국과 근대화와의 추구 3. 국권 상실과 민족의 수난 4. 독립운동 CHAPTER 5. 대한민국의 발전 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2. 대한민국의 발전 CHAPTER 6. 인물로 보는 한국의 역사 1. 고대의 인물 2. 중세의 인물 3. 근세의 인물 4. 근대의 인물 5. 현대의 인물	전통편: 제1강 한민족의 기원과 고조선 제2강 고대국가의 성립과 남북국 시대 제3강 고려 왕조의 성립과 전개 제4강 고려 후기의 정치변동과 대몽항쟁 제5강 고려의 쇠락과 공민왕 제6강 조선, 새로운 왕조의 시작 제7강 훈민정음 창제와 경국대전 정비 제8강 유교적 사회 질서의 확산 제9강 왜란과 호란 제10강 왕조의 궁궐 제11강 영조·정조 시대의 개혁 정치 제12강 서민문화의 융성 제13강 실학의 발달과 그 갈래 제14강 혼란스러운 조선과 서구 열강의 충돌 제15강 조선 왕조의 몰락과 민중의 대두 근현대편: 제1강 독립 협회의 활동과 대한 제국 제2강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구국 운동 제3강 무단 통치기 한국의 변화 제4강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제5강 근대 도시의 성장과 발전 제6강 해외 한인 사회의 형성 제7강 국내외 민족 운동의 전개 제8강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동원 제9강 해방과 민족 분단 제10강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 제11강 박정희 정부와 유신체제 제12강 성장하는 한국 경제 제13강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 제14강 냉전 체제의 긴장과 완화 제15강 한국 문화의 세계화	I 한국 역사의 시작 (B.C.50만~B.C.1세기) II 삼국시대의 개막 (B.C.1세기~A.D.700) III 남북국을 이룬 통일신라와 발해(648~926) IV 통일국가 고려의 등장 (900~1135) V 외세와 싸우며 형성된 새로운 역사 인식(1135~1380) VI 조선의 건국, 새로운 전통의 시작(1380~1474) VII 유교문화의 확산 (1474~1650) VIII 변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 (1650~1862) IX 전하기를 맞이한 조선 (1863~1896) X 국민국가 건설의 좌절과 식민지 체제(1867~1921) XI 해방을 준비한 한국인들 (1922~1945) XII 민주공화국의 수립과 분단 (1945~1960) XIII 변화하는 한반도, 역동적인 대한민국(1960~2010)

다만, 그 필요와 취지에 적극 동의하더라도, 위의 교재들은 교과서와 달리, 소수의 필자가 개인의 능력으로 집필을 전담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²⁾ 교과서처럼 엄격한 집필기준과 엄정한 검정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더라도, 읽는 외국인 독자의 입장에서는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밀하게 검증될 필요는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위 교재들의 내용 및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역사 교재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개선방안의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분석 범위는 고대사 기술로 국한한다. 필자의 전공을 고려한 것이지만, 고대사는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국수주의적 역사인식과 한국사 체계의 오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II. 편집 및 구성의 문제

먼저, 구성상의 특이점이 주목된다. 고대사 부분의 양적 비중이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아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발간의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고대사의 비중은 7~9% 정도이다. 2014년 발간되었던 김인정 교과서 내용 중 고대사의 분량이 대략 14%였던 사실을 유의하면(이정빈 2018, 14-16), 고등학교 교과서 중 고대사의 분량과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래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4종의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가운데 3종(박성준 외 2011; 이연주 2019; 전국역사교사모임 2021)은 고대사의 분량이 전체의 20%를 상회한다. 외국인 독자에게 한국 고대사 학습의 의미와 필요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지나친 분량으로 인해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표 2〉 고등학교 한국사(2020) 교과서 9종의 고대사 부분 양적 비교

고등학교 교과서	장의 비중	쪽수 분량
금성출판사	2/26(7.7%)	26/306(8.5%)
동아출판	2/26(7.7%)	20/298(6.7%)
리베르스쿨	2/26(7.7%)	24/300(8.0%)
미래엔	2/24(8.3%)	24/301(8.0%)

2) 박성준 외(2011)의 집필자 2인 가운데 한국 역사 전공자는 1인이다. 이연주(2019)는 비전공자 1인이 집필하였다. 김경호 외(2020)의 집필자 5인 가운데 한국 역사 전공자는 없다. 전국역사교사모임(2021)의 경우, 7인의 편찬위원과 12인의 검토위원이 있었지만, 집필은 2인뿐이었다.

고등학교 교과서	장의 비중	쪽수 분량
비상교육	2/26(7.7%)	24/304(7.9%)
씨마스	2/26(7.7%)	26/315(8.3%)
지학사	2/26(7.7%)	26/298(8.7%)
천재교육	2/25(8.0%)	28/310(9.0%)
해냄에듀	5/66(7.6%)	18/309(5.8%)

〈표 3〉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4종의 고대사 부분 양적 비교

교재	① ³⁾	②	③	④
장의 비중	2/7(28.6%)	1/5(20%)	2/30(6.7%)	3/13(23%)
쪽수 분량	28/90(31.1%)	45/102(44.1%)	28/344(8.1%)	70/300(23.3%)

한편,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특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교재, 교과서 등과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표현의 난이도를 낮추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지만(박성준 외 2011, 7), 선명하지 않다. 한국인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서술된 단어가 어려워서 한국사를 어려워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송호정 2016, 293),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풀어쓰려는 노력이 가장 크게 요구된다. 이외에도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눈에 띈다.

첫째, 표기의 문제이다. 역사 서술의 특성상 한자어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한글만 표기할 경우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아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원 전후 시기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여러 국가가 존재하였다. 북방에서는 부여 외에도 고구려와 옥저, 동예가 일어났고, 남쪽에서는 크고 작은 국가들이 마한, 진한, 변한의 연맹체로 새로이 결집되었다. 북방에서 일어난 국가들은 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한족세력과 대립하거나 교섭하면서 성장하였다. 특히 고구려는 한족세력과 여러 차례 투쟁하면서 국가를 발전시켰다. 모두 54개국으로 이루어진 마한에서는 백제가, 각각 12개국으로 이루어진 진한과 변한에서는 사로와 구야가 두각을 나타냈다. 이들이 훗날 한국 고대사의 주역이 될 백제와 신라, 가야였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35).

3) 교재 ①의 경우, 표 1에서 확인되듯이 총 1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 부분은 앞의 7개 장만 해당한다.

위의 인용문은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등의 초기 국가들이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성장하던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이 외중에 한(韓)과 한(漢)이 한(韓)-한(漢)-한(韓)의 순서로 교차되며 서술되었는데, 구분 없이 ‘한’으로 표기되었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독자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의 서술 중 마한 등의 한과 한족세력의 한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거나(박성준 외 2011, 19), 한자병기와 함께 한(韓)과 한(漢)을 교차하지 않고 절을 구분하여 서술(김경호 외 2020, 22-26)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위의 서술에 따르면 마한의 백제가 훗날 한국 고대사의 주역이 될 백제였다고 한다. 『삼국지』에 나오는 마한 54개국 가운데 하나인 백제국(伯濟國)이 훗날 백제(百濟)로 성장한 사실을 전한 것인데, 한자를 병기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의미를 알 수 없는, 백제가 백제가 되었다는 어색한 서술이 되고 말았다. 필요에 따라 한글, 한자, 영어를 함께 병기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시도가 주목된다(박성준 외 2011).

둘째, 서술 방식의 문제이다. 한국어가 서툰 독자들을 위해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한자어들을 쉽게 풀어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나당연합/동맹 즉, 신라와 당(唐)의 연합/동맹을 설명할 경우, ‘나’가 신라를, ‘당’이 중국의 당을 각각 가리킨다는 사실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A1 고구려는 신라와 당이 손을 잡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668년에 멸망하였다(박성준 외 2011, 31).

A2 나당 연합군의 침입 : 신라군(김유신)과 당군(소정방)의 침입 (이연주 2019, 29).

A3 당나라는 고구려 정복을 위해서 한반도 내의 다른 세력과 연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백제의 공세에 부담을 느끼던 신라 또한 당나라와의 연합을 통한 세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나-당 동맹(羅唐同盟)이 성사되었습니다(김경호 외 2020, 37).

A4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이 이루어지면서 동북아시아 정세는 빠르게 변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는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도, 내부 개혁을 통해 국력을 결집하지도 못하였다. 두 나라는 강력한 나당 연합군을 개별적으로 상대해야 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68).

위의 인용문은 고구려·백제·신라가 각축하던 7세기에 신라가 중국의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백제를 압박하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A1은 나당연합을 ‘신라와 당이 손을 잡은’ 것으로 설명했고, A3은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은 구체적인 배경까지 설명한 반면, A4는 그러한 설명이 없다. 배경지식 없이, A4의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과 ‘나당 연합군’을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다. 특히, A4의 ‘두 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신라와 당을 가리키는지도 배경지식 없이는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A2는 나당 연합군이 신라군과 당군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만, 의미함축적인 한자어만 나열한 개조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유학생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특히, A2에서 인용한 교재는 그 핵심내용을 대부분 한자병기 없이 개조식으로 서술했는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한편, A3은 신라와 당이 ‘연합’한 결과를 나당‘동맹’으로 표기했고, A4는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을 나당 ‘연합’으로 표기했다. 양국의 당시 관계를 연합으로 해석할 것인지, 동맹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고(김종복 2019, 238-240 참고), ‘연합’과 ‘동맹’의 개념에 관한 논의로도 이어지지만(신가영 2017), 양자를 혼용하는 것은 문제이다.

셋째, 참고 및 보충자료의 문제이다. 본문에서 다루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 인물, 용어 등에 관한 추가 설명자료는 필요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독자를 배려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풍부한 시각자료를 활용하거나(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본문과 관련된 인물 및 사건을 대화나 이야기의 형식으로 흥미롭게 재구성한 자료(이연주 2019)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만하지만, 외국인만을 배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연표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본국의 역사 혹은 세계사와 비교하며 한국 역사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단원의 첫머리에 연표를 배치하여 외국의 역사적 사건을 표기하기도 했지만(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매우 소략할 뿐만 아니라 주로 유럽과 중국의 역사만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2021년 자료 기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40%에 육박(전체 163,697명 중 63,491명)하고, 상위 4개국(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출신 유학생이 전체의 약 80%에 달한다는 점이 참고된다.

한편, 단원마다 해당 시기와 관련된 한국의 사극(드라마, 영화 등)을 소개하는 코너(김경호 외 2020)는 외국인 독자를 고려한 참고자료로서 주목된다. 단, 시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⁴⁾ 특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고, 지인과 토론해보라는 제안은 팩트와 픽션을 분별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해당 코너에서 참고자료로 제시한 드라마 ‘주몽’의 경우, 부여에서 황제 칭호가 사용된 것으로

4) 고대사 부분에서는 드라마 ‘주몽’(2006~2007), ‘대조영’(2006~2007), 영화 ‘황산벌’(2003), ‘평양성’(2011), ‘안시성’(2018) 등이 거론되었는데, 영화 ‘안시성’을 제외하면, 모두 10년~20년이 지난 작품들이다. 2000년 이후 고대사를 소재로 한 이른바 정통 사극 드라마는 이외에도 ‘연개소문’(2006~2007), ‘근초고왕’(2010~2011), ‘광개토태왕’(2011~2012), ‘대왕의 꿈’(2012~2013), ‘한국사기’(2017) 등이 있는데(정동준 2016, 127), 이 가운데 위의 작품들이 선정된 이유가 불분명하다.

묘사하거나, 기원전 82년에 없어진 임둔(臨屯)과 진번(眞番)을 그로부터 20여년 이후(기원전 59년)에 태어난 주몽이 공격한 것으로 묘사하는 등의 사실 왜곡(서길수 2007, 24-36)으로 인해, 정통 사극이 아닌 퓨전 사극으로 분류된다(정동준 2016, 127).

요컨대, 위 4종의 교재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상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독자를 배려하는 서술 태도와 구성이 부족했다. 특히, 어려운 한자어를 설명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같은 발음의 한자어들을 구분 없이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가 컸다. 비교연표 등을 활용하여 이해를 도우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Ⅲ. 국수주의적 서술의 강박과 오류

검정을 거친 교과서의 경우에도 국수주의적 서술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임지현 1999; 徐毅植 2001; 김한규 2002; 송호정 2003; 梁正鉉 2005; 김한중 2006; 김기봉 2006; 김나연 2014; 朴美先 2018; 정동준 2019; 조영광 2019; 장창은 2020; 이정빈 2021),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비판과 성찰이 집필기준에 일정부분 반영되어 현행 교과서에 이르렀다. 물론 현행 교과서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논의가 집적된 나름의 성과인 셈이다.

반면, 위 4종 교재의 서술 중에서 구태의 역사 인식을 답습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오류가 확인되는데, 대체로 오래된 역사, 광활한 영토를 강조함으로써 한국 역사의 유구함, 강대함 등을 드러내려는 국수주의적 의도가 포착된다.

1. 오래된 역사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한곳에 머물러 정착 생활을 하였는데, 이들이 현재 한국인으로 이어지고 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24).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약 70만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 단, 그들은 정착생활을 하지 않고, 동굴 등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위의 서술은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정착생활을 했다는 정보를 토대로, 이들이 정착함으로써 말미암아 계속 이 땅에 살았고, 따라서 한국인의 기원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 혹은 한민족이라는 용어는 공통의 조상, 공통의 언어, 공통의 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민족을 단위로 한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민족(nation)에 선행하는 에스닉 그룹(ethnic group)이 있었다는 전제 위에서 그 기원 내지 형성시점으로서 단군조선의 성립(申采浩 1908: 2007, 311), 예(濊)·맥(貊)·한(韓)의 분포(과학원 역사연구소 1962; 金廷鶴 1964), 신라의 삼국통일(孫晉泰 1948, 126; 김석형·박시형 1953; 임지현 1994, 119-125), 고려의 후삼국통일(盧泰敦 1997, 180)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주목되어 왔다.

위의 서술은 민족의 개념 및 형성시점에 대한 이러한 여러 논의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인/한민족의 기원을 단군조선의 성립 즉 청동기시대 보다 이른, 신석기시대로 소급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공통의 조상, 공통의 언어, 공통의 문화 등을 공유했다는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서술이 시도된 데에는 한국 역사의 기원을 신석기시대로 소급하려는, 일종의 강박이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박은 아래의 서술들에서도 확인된다.

- B1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한 이는 단군왕검으로, 그는 한국인의 시조로 받들어진다(박성준 외 2011, 18).
- B2 고조선의 건국: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음(이연주 2019, 3).
- B3 『삼국유사』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의 『사기』, 『한서』, 『후한서』 등의 역사서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단편적으로 나옵니다(김경호 외 2020, 20).
- B4 그러나 고조선이 언제 건국되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기원전 7세기에 쓴 중국의 『관자』라는 책에 “조선은 (중국 제나라에서) 8,000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라고 언급되어, 적어도 기원전 7세기 이전에 국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29).

위의 인용문은 고조선의 건국시점을 전하고 있다. B1~B3은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특히, B3은 그 근거로서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삼국유사』는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당고⁵⁾즉위50년경인(唐高卽位五十年庚寅)’으로 전하는 『고기(古記)』를 인용한 뒤, ‘요(堯)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년(戊辰年)이기 때문에 50년은 정사년(丁巳年)이지 경인년(庚寅年)이 아니므로, 『고기』의 기록은 의심스럽다’는 일연(一然)의 해석⁶⁾을 전한다. 즉, 일연은 고조선의 건국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5) 고려 정종의 이름인 堯을 피휘하여, 高로 고쳤다.

고백한 셈이다. 따라서 B3의 서술은 명백한 오류이다.

한편, 기원전 2333년은 중국 요임금대의 무진년을 서기(西紀)로 환산한 것으로, 무진년 건국설은 13세기에 편찬된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 처음 확인되며,⁷⁾ 15세기에 편찬된 『동국통감(東國通鑑)』에서 정착되었다.⁸⁾ 단, 『제왕운기』와 『동국통감』은 고조선의 건국 시점을 공히 무진년으로 보고 있지만, 그 기준인 요임금의 즉위년을 달리 본다. 전자는 요임금의 즉위년을 무진년으로, 후자는 갑진년(甲辰年)으로 보는데, 이는 중국 송대(宋代) 이래의 이설(異說)이 각각 반영된 결과였다(박대재 2015, 8-10). 즉, 『삼국유사』·『제왕운기』·『동국통감』에서 활용된 고조선 건국연대 비정의 준거는 각기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고조선 멸망 이후 1천년여가 지난 이후의 기록들이므로, 어느 것 하나를 쉽게 따르기 어렵다. 이로 말미암아 고조선의 건국연대에 관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박대재 2015), 기원전 2333년으로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B1~B3은 고조선의 건국시점을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고조선의 성립 기반인 청동기 문화는 도리어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무렵(박성준 외 2011, 15; 김경호 외 2020, 17) 혹은 기원전 2000년경(이연주 2019, 3)에 성립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고조선의 건국이 그 바탕인 청동기 문화의 성립보다 앞서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⁹⁾ 고조선의 건국을 고대로 소급하려는 강박의 소산이다. 반면,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늦어도 기원전 7세기에는 존재했다는 B4의 조심스러운 표현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2. 강대한 나라

기원전 4세기에 고조선은 주변의 작은 국가들을 제후국으로 삼는 왕국으로 발전하면서 한족의 연 왕국과 한때 전면전을 벌이기도 하였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30).

위의 서술은 고조선이 제후국을 거느린 왕국이었다고 설명한다. 『위략(魏略)』에 따르면, 이 시기의 고조선은 왕을 자칭하였다.¹⁰⁾ 『위략』은 3세기에 편찬된 책으로, 후대의 윤색이

6)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堯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三國遺事』 卷1, 紀異1, 古朝鮮)

7) “初誰開國啓風雲 釋帝之孫名檀君 竝與帝高興戊辰”(『帝王韻紀』 卷下)

8) “東方初無君長 有神人降于檀木下 國人立爲君 是爲檀君 國號朝鮮 是唐堯戊辰歲也”(『東國通鑑』 東國通鑑外紀, 檀君朝鮮)

9) 이러한 모순은 현행 교과서에서도 확인된다(조영광 2022, 35-37).

가해졌겠지만, 고조선과 연(燕)의 관계 기사는 교차검증을 통해 사실성이 인정된다(盧泰敦 1990, 32-33). 따라서 고조선을 왕국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다만, 기원전 4세기의 고조선이 주변국을 제후국으로 삼았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서술은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고조선의 위상을 제고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대체로 중원왕조에 복속되어 있던 고조선의 종속적 국제관계(송호정 2020 참고)는 설명에서 배제한 채, 위와 같이 연과 전면전을 벌였다는 기술이나, 고조선 멸망 과정에 관한 내용을 ‘한과 고조선의 대결’이라는 표제로 다룬 것(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31)은 고조선을 중원왕조와 대등한, 혹은 버금가는 주체로 확대 해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한과 1년동안 전쟁을 계속하면서 힘이 약해졌고,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면서 결국 기원전 108년에 이르러 멸망하였다(박성준 외 2011, 19).

『사기(史記)』에 따르면, 고조선은 기원전 109년부터 한의 공격을 받았고, 1년간의 항전 끝에 패배함으로써, 멸망했다. 명백한 사실은 고조선의 멸망 원인이 한의 공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조선 멸망 이후 고조선의 땅에는 낙랑군(樂浪郡)·임둔군(臨屯郡)·진번군(眞番郡) 등 한의 군현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위의 서술에 따르면, 고조선의 멸망은 지배층의 내분에 의한 것으로 읽힌다. 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내부 분열을 내세움으로써, 고조선이 한과의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특히, 위 교재는 고조선의 멸망 이후 설치된 한군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한에게 졌다는 사실과 그 결과로 한에게 복속되어 있던 역사적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한과 대립했던 고조선의 강대함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들(漢)이 남겨놓고 간 통치기관들은 채 몇 년도 안 되어 폐지되었다. 수도가 함락된 뒤에 도 옛 조선인들이 거세게 저항하였기 때문이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31).

위의 서술에서 한이 ‘남겨놓고 간 통치기관’은 낙랑군·진번군·임둔군·현도군(玄菟郡) 등의 한사군(漢四郡)을 의미한다. 한사군이 몇 년도 안 되어 폐지되었다는 기술은 명백한 오류이다. 진번군과 임둔군은 기원전 108년 설치되었다가 기원전 82년에 각각 낙랑군과 현도군으로 통합되었다.¹¹⁾ 현도군의 경우, 기원전 107년에 설치되었고, 현재의 중국

10)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 韓)

11) “至昭帝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并樂浪玄菟” (『後漢書』 卷85, 東夷, 滅)

랴오닝성 차오양(朝陽)으로 옮긴 세 번째 이치 전까지 약 400여년간 고구려 등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윤용구 2008). 특히 낙랑군의 경우에는 한의 멸망 이후에도 공손씨(公孫氏) 등이 운용하다가, 313년에야 고구려에 의해 축출됨으로써,¹²⁾ 약 400여년간 현재의 평양지역에 존속했다. 위와 같은 기술은 한국의 초기 국가 성립 과정에 미친 한사군의 영향 및 관계 등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오히려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편, 한사군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하는 사료는 많지 않다. 다만, 아래와 같은 서술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포착된다.

고조선을 통일한 무제는 고조선의 옛 땅에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한나라 사람들은 강제로 땅과 재물을 빼앗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항하면서 민족적 자각 의식을 갖게 되었고, 빼어난 철기 문화에 힘입어 여러 부족 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이연주 201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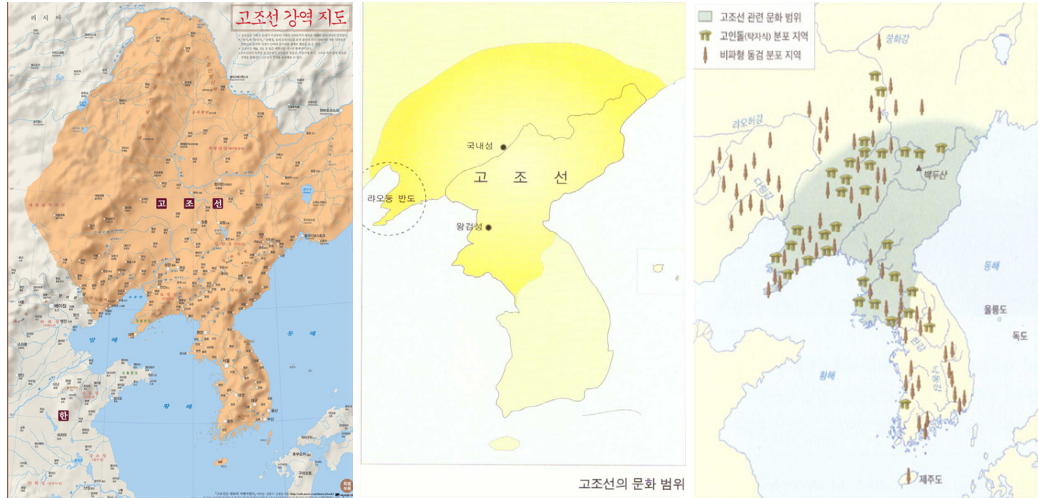
한의 통치에 대한 위와 같은 부정적 묘사는 근대적 민족의식을 이 시기까지 소급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을 떠나 중국/한에 귀부한 예군 남려(濊君 南閩)나 조선상 노인(朝鮮相 路人) 등의 사례를 통해 보면, 과연 그 시기에 민족적 자각 의식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근대적 민족 개념을 고대로 투영하려는 것은 민족주의의 강박이기도 하다.

위 인용문에서는 그 외에 용어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의 고조선 공격과 그 결과로서 한사군 설치를 ‘한의 고조선 통일’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일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로 통합된다는 의미일 뿐이지만, 역사용어로서 통일은 주로 ‘원래 하나였던 것이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통합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김영하 2016, 4). 고조선이 통일된 것이라면, 원래 중국/한이었던 곳이 고조선으로 나뉘어 있다가 다시 중국/한이 되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다음, 고조선 이래 등장한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등의 초기국가를 ‘부족’ 국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부족이라는 단어 역시 사전적으로는 넓지 않은 지역에서 공통의 조상, 언어, 종교 등을 가진 초기사회의 구성 단위 내지 생활공동체라는 의미이지만, 역사용어로서는 신진화론에서 국가발달단계를 설명하며 제시했던 ‘band-tribe-chieftdom-state’의 도식 중 tribe의 번역어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tribe의 번역어로서 ‘부족’과 state의 번역어로서 ‘국가’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미 1970년대 이래 있어 왔다(金貞培 1973). 게다가, 부여 등의 초기 국가들은 tribe나, state가 아닌 chieftdom 단계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위의 ‘부족 국가’라는 용어는 명실상부 부적절하다.

12) “十四年 冬十月 侵樂浪郡 虜獲男女二千餘口”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3. 광활한 영토

〈표 4〉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4종의 고조선 관련 지도



(이연주 2019, 5)

(박성준 외 2011, 19)

(김경호 외 2020, 19)



(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29)

위의 표 4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조선의 범위로 설정된 지역의 크기 차이뿐만 아니라, ‘강역’과 ‘문화 범위’, ‘관련 문화 범위’, ‘예맥족 거주지’ 등의 단어 차이이다. 1990년, 제5차 교육과정 교과서부터 「고조선의 ‘세력’ 범위」라는 제하에 지도가 제시되었는데, 고조선 관련 문화 지표로 알려진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탁자식 고인돌, 미송리형 토기 등이 공반 출토되는 지역을 선과 면으로 표시한 것이었다. 과연 유물 현황을 정치적 영역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었고(송호정 2003), 이에 따라 이후 교과서에서는 고조선 ‘세력’ 범위가 아닌 ‘문화’ 범위로 수정되었다(조영광 2022). 위의 표에서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로 표기하거나(김경호 외 2020, 19), ‘예맥족 거주지’로 표기(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29)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결과였다. 반면, 한반도 전부와 중국의 동북3성 전부, 내몽골 일부와 러시아 연해주 일부까지 포괄하는 위의 ‘고조선 강역 지도’는 그 크기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역’이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다.

한편, 고구려 광개토왕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한국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영토를 넓힌 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고구려의 지배권력은 왕에게 더욱 집중되어, 왕 중의 왕으로서 대왕/태왕으로 불리기도 했다(여호규 2010). 단, 아래와 같은 설명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C1 광개토대왕 : 동아시아의 대제국을 건설 (이연주 2019, 80)

C2 위기를 딛고 대제국으로 발전한 고구려 (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51)

5세기경의 고구려가 독자적 천하관을 바탕으로, 다원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盧泰敦 1988), 대제국이라는 표현은 어색하다. 제국은 단지 영토가 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역사용어로서 황제는 왕의 상위개념으로서, 주변국을 복속시키고 그 왕들을 제후화함으로써, 이원적 통치구조를 갖는다. 고구려의 대왕/태왕은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이지만, 황제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盧泰敦 1988, 50-62 참고). 단, 위의 교재에서 대왕/태왕과 제국에 대한 설명 없이, 대제국을 건설했다고만 서술한 것은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제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광활한 영토’의 이미지만을 차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위 4종의 교재들은 오래된 역사, 강대한 나라, 광활한 영토를 강조하는 국수주의적 서술이 많았다. 구태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있었던 사실을 은폐 혹은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의 역사가 유구하고, 강대했으며,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었다는 서사, 즉 국수주의적 서사가 독자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어떠한 의미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V. 한국사 체계의 함정

고조선을 한국 역사의 출발로 설정하고, 삼국-남북국-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계보도를 그리고 있는 한국사 체계는 ‘처음부터 있었던 원형이 역사의 유전자처럼 계승’된다고 믿는 ‘기억의 망상’이다(김기봉 2008, 26). 위 4종의 교재들도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한국사 체계를 아래와 같이 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표 5〉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4종의 서사 도식

① 박성준 외	초기국가(고조선-여러 나라)-삼국-남북국-고려-조선
② 이연주	고조선-여러 나라-삼국-남북국-고려-조선
③ 김경호 외	고조선-여러 나라-고대국가(삼국-남북국)-고려-조선
④ 전국역사교사모임	고조선-여러 나라-삼국-남북국-고려-조선

1. ‘고조선-여러 나라’ 계보의 오류

D1 고조선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펼치다가 멸망할 무렵, 주변 지역에서는 한민족의 또 다른 집단들이 부족 단위로 세력을 키워갔다. 기원 전후의 시기에 이들 세력은 다른 부족과 연합하거나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여 마침내 체제를 갖춘 국가로 발전해 나갔다. 만주 지역에는 부여가, 압록강 일대에는 고구려가, 한반도의 북부 동해안 지방에는 옥저와 동예가 자리를 잡았다. 한편 한반도의 남부 지방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으며 이를 삼한이라고 하였다(박성준 외 2011, 19).

D2 고조선에 뒤이어 일어난 나라들: 고조선 멸망 후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부여·고구려·옥저·동예·마한·변한·진한 등의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음 (이연주 2019, 4)

D3 결국 한나라 무제의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지배층의 내분이 이어지면서 멸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멸망한 고조선의 일부 영토에 군현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분화가 일어났고, 해당 지역에서 여러 부족들이 연맹하거나 분리하여 각각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는 유입된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부여와 고구려와 같은 세력들이 등장하였습니다(김경호 외 2020, 22-23).

위의 인용문은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등 초기 국가들의 성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위의 서술들이 고조선과 여러 나라(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등)를

선후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D1은 여러 나라가 고조선이 멸망할 무렵에 세력을 키웠다고 설명했고, D2는 고조선의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으며, D3은 고조선 멸망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설명함으로써, ‘고조선-여러 나라’의 계보도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현행 역사교과서 분석을 통해, 고조선=청동기 문화, 여러 나라=철기 문화라는 이분법적 이해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朴賢淑 2011, 7)이 있었듯이, ‘청동기 문화의 고조선에서 철기 문화의 여러 나라로’와 같은 도식적 이해는 ‘여러 나라’의 성립 시기를 실제보다 늦출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다원적 기원과 다양한 경로의 사회변화를 생략한다(이정빈 2021, 391). 특히, 여러 나라 가운데, 부여는 기원전 10~3세기에 송화강 유역에서 발달한 청동기 문화에 기초하여 성립하였고, 유라시아 초원의 청동기·철기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고구려 역시 기원전 4~3세기 압록강 중류 유역의 청동기~철기문화에 기초하여 성립하였다.

다시 말해, 부여와 고구려는 고조선 멸망에 앞서 이미 다양한 경로의 청동기·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해 있었고, 따라서 고조선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고조선·부여·고구려 등 여러 나라가 공존하고 있었다. 다양한 사회와 문화의 공존과 병립을 삭제하고,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문화세례 및 사회이행으로 역사를 전유하는 것이 한국사 체계의 함정이다.

2. ‘발전’ 서사의 폭력성과 ‘삼국시대’

한국사 체계에서 한국의 역사는 중앙집권과 왕권강화를 정치적 ‘발전’으로, 권력의 자본축적과 그를 위한 기술발달을 경제적 ‘발전’으로 묘사하고, ‘선진’의 지표로 삼았다. 이러한 근대로의 이행 서사에서 한국의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허구의 ‘발전’을 거듭해 온 것으로 묘사되었는데(김기봉 2008; 앙드레 슈미드 2007; 도면희 2009), 4종의 교재들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차례의 교섭과 대결 과정에서 한자를 비롯한 한족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를 갖추는 등 정치·사회적인 발전을 이루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30- 31).

고조선 부분에 서술되어 있는 위의 문장은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사 체계의 역사서술 가운데 어느 시기에 놓더라도 어색하지 않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한족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국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특히 이것을 정치·사회의 유일무이한 ‘발전’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발전’을 빨리 달성할수록 선진사회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서술이 주목된다.

2세기 고국천왕 대에 이르면 기존 다섯 부족이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5부체제로 개편하면서 고대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습니다(김경호 외 2020, 28).

고구려의 다섯부족이 행정적 기능의 5부체제로 개편되었다는 위의 서술은 단위정치체로서의 고유명 5부에서 행정단위로서 방위명 5부로의 전환을 뜻한다. 물론 고구려의 5부는 고유명부에서 방위명부로 전환되었지만, 그것이 위의 설명처럼 2세기 고국천왕대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2세기경에서 4세기경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임기환 2004, 103-110). 특히, ‘고대왕국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서술을 통해, 행정적 기능의 5부체제를 이른바 ‘발전’된 중앙집권적 면모로 파악하고, 그러한 중앙집권적 면모의 등장을 2세기까지 소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이러한 ‘발전’ 서사는 중앙집권 혹은 왕권강화를 이루지 못한 사회를 역사의 패배자 혹은 조연으로 낙인찍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을 역사의 승리자이자 주인공으로 묘사한다.

가야 연맹을 주도하던 금관가야는 4세기 말~5세기 초에 고구려·신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크게 패한 뒤, 국가를 보전하기도 어려운 처지였다. 지도자를 잃은 가야의 여러 국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부여와 가야가 탈락하고 이제 고구려와 백제, 신라 세 나라가 남았다. 북쪽의 고구려, 남쪽의 백제와 신라. 훗날 하나의 국가로 통합될 이 세 나라가 경쟁하던 시대를 한국인들은 삼국시대라고 부른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47).

위의 내용은 ‘부여와 가야의 탈락’이라는 표제 아래 서술되어 있다. ‘삼국시대’라는 한국사 체계의 시대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레토릭이다. 부여와 가야뿐 아니라, 옥저와 동예, 삼한의 여러 소국들도 ‘삼국시대’를 위해 사라졌다. 위의 기술은 5세기 초 금관가야의 실세(失勢)를 4세기 부여의 고구려 복속과 함께 ‘삼국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금관가야의 실세 이후 5~6세기의 가야 제국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존속하며 해상교역 활동을 전개하였고, 479년에는 남제(南齊)에게 책봉을 받기도 했다.¹³⁾ 대가야 중심의 가야 제국을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가야연맹과 구분하여 후기가야연맹으로 부르기도 한다(金泰植 1990). 가야의 5~6세기 역사를 삭제한 이유는 명실상부한 ‘삼국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13)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 荷知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南齊書』卷58, 東夷, 加羅國)

E1 가야연맹의 여러 나라들은 국력이 비슷하여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 신라에 합병되고 말았다(박성준 외 2011, 34).

E2 여전히 각 부족들의 정치적 기반이 유지되었기에 특정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국가로까지 성장하지는 못하였습니다(김경호 외 2020, 32).

연맹왕국→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도식은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탈락한 가야를 한국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규정하며 ‘삼국시대’라는 한국사 체계를 공고히 한다. 이렇게 탈락한 부여·가야·옥저·동예·삼한 등의 다양한 문화는 소거되고, 오로지 삼국의 문화만이 주목받는다. 문화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획일화를 ‘발전’으로 평가한다. 과연 이러한 서사가 앞으로의 다문화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4종에서 부여와 가야 등의 퇴장을 아예 서술하지 않거나(씨마스 2020; 해냄에듀 2020), 가야는 신라에 의해 멸망 당했다는 결과만을 건조하게 서술(동아출판 2020, 15; 리베르스쿨 2020, 20)한 것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일정 부분 공유했기 때문일 수 있다. 비록 삼국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부여와 가야 등이 ‘발전’하지 ‘못’하여 ‘탈락’한 것이라는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발전’ 서사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3. ‘삼국통일’과 ‘남북국’의 모순

F1 신라의 삼국 통일은 한국인에게 동일한 민족문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박성준 외 2011, 34).

F2 삼국통일의 의의 : 최초의 민족통일로 새로운 민족 문화 형성의 계기 (이연주 2019, 29)

F3 특히 이 사건은 한반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세력들이 대륙 세력에 맞서서 처음으로 민족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음과 동시에, 대륙세력에게 한반도의 독자적인 통일국가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의미를 갖습니다(김경호 외 2020, 38-39).

F4 공동의 경험이 확대되면서 동질감이 강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신라가 두 나라를 통합하여 200년 이상 통일국가를 유지한 것은 한국 민족의 형성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신라 왕실이 ‘우리가 삼국을 통일하였다’고 주장한 것도 틀린 이야기만은 아니었다(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72).

F1~F4는 공히 7세기 신라의 삼국통일을 민족문화 혹은 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시점으로서 특기하고 있다. 한국인/한민족의 기원은 청동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동질감이 강화'된 '민족적인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바로 이때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후의 신라는 '통일신라'로 구분하여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과연 여전히 유효한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대신할 근대적 주체로서 민족을 규정하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사 복원을 시도했던 신채호 이래, 한국 근대 역사학의 한국사 체계는 단일민족의 계보사였다(앙드레 슈미트 2007). 고조선에서 삼국통일로 시점이 많이 내려왔지만, 위의 교재들 역시 여전히 고대에 형성된 단일민족이 현대까지 이르고 있다는 계보사로 구성되었다. 이 와중에 삼국통일 이후의 고구려유민, 백제유민 등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와 역사는 배제되었다(정동준 2019, 208-209). 고대에 형성된 유구하고 강고한 단일민족 서사를 고수하는 것은 다문화사회를 전망하는 현대 한국사회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민족형성은 고대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서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행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3종(금성출판사 2020; 비상교육 2020; 해냄에듀 2020)에서 신라의 삼국통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에도 민족 형성/통합/통일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동북공정의 여파로 발해 역사의 귀속문제가 불거지면서, 발해를 한국사 체계에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기왕의 '통일신라시대'를 대신하여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가 새삼 강조되었다. 남쪽의 신라와 함께, 북쪽의 발해도 한국의 역사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었다.

- G1 남북국을 이룬 통일신라와 발해 (박성준 외 2011)
- G2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 (이연주 2019)
- G3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의 형세 (김경호 외 2020)
- G4 남북국을 이룬 통일신라와 발해 (전국역사교사모임 2021)

4종의 교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사이를 남북국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F에서 설명한대로, 신라의 삼국통일이 민족문화 내지 민족공동체가 형성된 사건이었다면, 신라의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건국한 발해는 민족문화, 민족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해는 한민족의 역사가 아닌 셈이다. 반대로, 발해가 한국사 체계에 포함된다면, 신라의 삼국통일에 부여했던 민족 형성의 기점이라는

의의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채, 즉 통일신라와 발해의 어색한 공존을 묵시한 채, F와 같이 삼국통일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G처럼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독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행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1종이 신라의 삼국통일이 아닌, 고려의 발해 흡수와 후삼국 통일을 민족의 통합으로 평가(동아출판 2020, 30)한 것은 위와 같은 모순을 인정한 결과였다. 한편, 나머지 5종 가운데 3종(미래엔 2020; 씨마스 2020; 지학사 2020)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민족의 통합/통일로 평가하면서도, 고려의 발해 흡수와 후삼국 통일을 민족의 재통합/재통일로 서술함으로써, 위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이 4종 모두 특정 역사적 사건을 민족의 형성/통일/통합으로 평가하고, 이를 ‘올바른’ ‘발전’의 방향으로 해석하는 단일민족의 ‘발전’ 서사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요컨대,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이어지는 한국사 체계는 허구이다. 단일민족의 ‘발전’ 서사에서 수많은 국가와 사회,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배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위의 4종 교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행 역사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된 문제이다.

V. 맺음말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 교재 분석, 특히 고대사 관련 기술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외국인 독자를 배려하는 편집 및 구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자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많았다. 둘째, 오래된 역사, 광활한 영토, 강대한 나라 등을 강조하는 국수주의적 서술이 많았고, 오류도 적지 않았다. 셋째, 한국사 체계가 갖는 단일민족의 ‘발전’ 서사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전망하는 한국 사회 내에서의 유효성을 의심했다.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비단 외국인 대상 교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 및 박물관, 유적지의 설명문 등 한국의 역사교육 전반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학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국내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또한 절실하다. 한국 역사교육은 더 이상 민족공동체의 결속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계시민을 교육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수요와 목적에 걸맞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과학원 역사연구소. 1962. 조선통사(상). 과학원출판사.
- 김기봉. 2006.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 _____. 2008. 한국 고대사의 계보학. 한국고대사연구 52, 19-55.
- 김나연. 2014. 국사(한국사)교과서 속 〈민족〉서술의 변화와 그 배경. 한국문화연구 27, 149-182.
- 김석형·박시형. 1953. 조선력사. 학우서방.
- 김영하. 2016.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 新羅史學報 38, 1-38.
- 金貞培. 1973. 韓國古代國家 起源論. 白山學報 14, 59-85.
- 金廷鶴. 1964.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1, 21-27.
- 김종복. 2019.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 127, 238-262.
- 金泰植. 1990. 加耶의 社會發展段階.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39-104.
- 김한규. 2002. 역사 교과서의 민족주의적 왜곡. 세계의 신학 54, 46-72.
- 김한중. 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 盧泰敦.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の 天下觀. 韓國史論 19, 31-66.
- _____. 1990. 古朝鮮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韓國史論 23, 3-55.
- _____. 1997. 한국민족형성시기론. 한국사시민강좌 20, 158-181.
- 도면희. 2009. 국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한국 근대 역사학의 창출과 통사체계의 확립. 역사학의 세기-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175-214.
- 박대재. 2015. 檀君紀元과 「古記」. 韓國史學報 61, 7-46.
- 朴美先. 2018. 역사교육에서 고대사 영역의 내용 체계와 계열성 검토. 歷史教育 147, 1-34.
- 朴賢淑. 2011. 중학교 『역사』(상)의 古代史 서술체계와 내용을 통해 본 韓國古代史像. 東國史學 51, 1-45.
- 서길수. 2007. 역사와 고구려 드라마 ‘주몽’. 高句麗研究 28, 9-48.
- 徐毅植. 2001. 포스트모던시대의 韓國史認識과 國史教育. 歷史教育 80, 1-30.
- 송호정. 2003.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선사 및 국가 형성 관련 서술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9, 9-46.
- _____. 2016. 학교에서의 한국고대사 교육 현황과 교과서 서술의 올바른 방향. 한국고사연구 84, 263-301.

- _____. 2020. 고조선과 연(燕)·진(秦)·한(漢)의 외교 관계. 사학연구 137, 165-206.
- 신가영. 2017. 가야사 연구와 ‘연맹’이라는 용어. 學林 40, 57-85.
- 申采浩. 1908. 讀史新論: 2007. 단재 신채호 전집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08-340.
- 앙드레 슈미드 지음.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 梁正鉉. 2005. 역사교육에서 민족주의를 둘러싼 최근 논의. 歷史教育 95, 1-28.
- 여호규. 2010. 高句麗 太王號의 제정과 國岡型 왕릉입지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5, 445-488.
- 윤용구. 2008. 현도군의 군현 지배와 고구려.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13-150.
- 이정빈. 2018. 국정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과 유사역사 문제. 역사교육연구 31, 7-37.
- _____. 2021. 역사교과서의 국수적 한국사 체계와 역사정책 성찰. 역사와교육 33, 383-420.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임지현. 1994. 한국사학계의 ‘민족’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28, 114-137.
- _____.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소나무.
- 장창은. 2020. 2020 발행 『중학교 역사 ②』 교과서 「선사문화와 고대국가의 형성」 지도·그림 자료 검토. 한국학논총 55, 389-429.
- 정동준. 2016. 드라마·영화에 나타난 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연구 84, 121-156.
- _____. 2019. 『한국사』교과서의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분석-고대사 부분의 서술내용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59, 195-220.
- 조영광. 2019. 새 중등 역사교육과정 한국고대사 내용 구성에 대한 제언. 民族文化論叢 72, 385-415.
- _____. 2022. 한국사 교과서 고대사 부분의 국수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歷史教育論集 80, 33-69.

● 투고일: 2022.12.30. ● 심사일: 2023.01.25. ● 게재확정일: 2023.02.20.

| Abstract |

Analysis of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a Focus on the Description of Ancient History

Kwon Soonhong (Daegu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presenting the need to verify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international students by pointing out the problems. Three major problems are posed in this article.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editing and composition considering international readers did not stand out, and rather, there is a lot of potential to confuse the readers. Second, there are many nationalistic descriptions that emphasize long history, vast territory, powerful country, and not a few errors in the description. The third problem is that since the narrative of the “development” of mono-ethnicity in the Korean history system has been followed as it is, the validity in Korean society of prospecting for a multicultural society is questionable. This article, therefore, raises the necessity of rigorous writing and strict verification of Korean history textbooks target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urges the preparation of alternatives.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 Korean History, Textbook, Nationalism, Korean History System